

22대 국회서도 난항... 與 “구조개혁 동반” vs 野 “先 모수”

9월 정기국회서 ‘연금개혁’ 논의 여야, 개혁 추진방향 놓고 대립 심화 전문가들 “시급한 모수개혁 우선”



22대 국회로 넘어 온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부. /뉴스시스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발돼 22대 국회로 넘겨진 국민연금 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벌여졌던 여·야 간 견해차가 22대 국회 들어 여당의 ‘구조개혁 동반’ 과 야당의 ‘모수개혁 우선’ 의 대립으로 확장하면서 파열음이 커져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9월 1일 개최하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구조개혁 동반’ 을, 야당은 ‘모수개혁 우선’ 을 견지하면서 여·야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여당의 ‘구조개혁 동반’ 방안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과 함께 기초연금 대상 조정·가입연령 조정 등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동시 추진하

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개혁안이 아직 없어 논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야당의 ‘모수개혁 우선’ 방안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별도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만큼 빠른 추진이 가능하지만, 향후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올해 초 시민참여 토론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한 차례 추진했다.

지난 4월 개최된 시민참여 토론 결과 ‘보장강화 우선(현행 40%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현행 9% 보험료율을 13%로 인상)’ 방안이 과반의 선택을 받았다.

여·야는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

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의 ‘43%’ 방안과 야당의 ‘45%’ 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여당이 소득대체율 44%까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제시했지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연금특위 해산을 끝으로 무산됐다.

5월 말에 이르러 야당이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받아들일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최종 불발됐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오는 9월 개최하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논의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보다는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준비에 힘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을 위원장으로 단독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식 입장을 결정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금 공부’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지난달부터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 차례 기회를 놓친 만큼, 연금개혁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의 시급성을 따지자면 소득대체율 44%안으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하는 구조개혁은 특위를 구성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한 개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가디 일단은 야당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힌 소득대체율 44%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이후 추가 모수개혁이나 구조개혁 방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이정식 “외국인근로자 안전대책 이달 발표”

(고용노동부 장관)

화성 아리셀 화재 중수본 2차 회의 유가족 지원·재발 방지에 만전 지시

외국인 근로자 등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

을 충분한 실태파악과 현장 및 협·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며 “개선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동종·유사업체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은 관계부처 간 밀도있게 논의해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 장관은 “안전교육은 확대·강화하고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지원을 촘촘히 하는 한편,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취약 분야에 대

한 지원·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에 취약해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국 전·후로 안전교육을 하고, 16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에 다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는 설명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5월 모바일쇼핑 거래액 15.5조 ‘역대 최대’

통계청, ‘5월 온라인쇼핑 동향’

올해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또다시 20조 원을 넘어섰다. 온라인을 통한 수입차 구매가 늘면서 자동차 관련 항목이 75%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이 역대 최대인 15조5000억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20조8652억 원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7%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전년동월대비 의복(-4.7%)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음식료품(16.1%)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

(11.7%),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5.0%) 등은 증가했다. 고물가에 음식료품 온라인 구매 추세가 이어지는 반면 의복에 대한 구매는 감소했다.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관련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구성비는 음식료품(13.9%), 여행 및 교통서비스(11.4%), 음식서비스(11.3%)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5144억 원으로 7.8% 증가했다. 이는 2017년 1월 관련 통계를 개편한 이래 최대 수준이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74.4%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74.3%)에 비해 0.1%포인트(p) 늘어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행복을 빛내고 도민을 잇다!!

행복을 빛어내는 도민중심 경기도의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이어집니다!!

